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종합계획

2023. 3.



행정안전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방향	4
III. 중점과제	5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주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5
2.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7
3. 지역의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8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10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11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13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지역사회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15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16
9. 주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19
IV.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20
V. 추진일정	22

별첨: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I. 추진배경

1 국내·외 정책환경

□ 정치적 환경: 지방시대 본격화 및 시민의식 향상

-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 협력 필요성 증대
- 시민의식 향상으로 정책 집행·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대국민 소통에 대한 요구 증가

□ 경제적 환경: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지속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및 경제적 양극화 심화
- 글로벌경제의 경쟁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위기의 상시화

□ 사회적 환경: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의 다양성 증대

- 기후변화 가속화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복잡성 증가에 따른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 급증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귀화, 외국인 유입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인구의 인적 구성 다양성 증대

□ 기술적 환경: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 ChatGPT* 등 방대한 정보(문자·영상 등)를 학습하여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 *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자연어를 기반으로 인간과 소통하는 대화형 AI 챗봇으로 소설·시·음악 등을 창작하고 프로그램 코딩 등 다양한 과제 수행 가능
- 디지털에 기반한 업무처리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

2 정부혁신 필요성

□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부혁신

- 정부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국정 기준을 국민에 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

* 【국정목표 1】 약속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는 먼저 발굴하여 제공하고, 공직 내 형식주의를 타파하여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정부 구현 추진

※ 3+1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 + 정부혁신)으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 대통령 주요말씀 >

'23.1.27. 행안부 업무보고	■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23.2.7. 국무회의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 기존 관행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

- 국민도 정부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공공서비스 및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
-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 정부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정부·민간·지역사회간 협력하는 것이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

< 정부혁신 인식조사 주요 결과 (온라인 조사, 2천 명 응답, 2023년 1월) >

■ 정부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19%	18%	16%	13%	11%	10%	15%
공개·개방	안전관리	서비스	공직문화	포용	참여	기타
■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7%	25%	17%	16%	15%		
소통·참여	민첩한 대응	상호협력	혁신 의지	필요성 인식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범정부 혁신이 필요함

3 정부혁신이 나아갈 길

< 행정(정책) 단계별 혁신의 방향 >

행정 단계	현황 진단	개선방향	전략
정책과제 발굴·대응	▶ 국가적 위기징후에 대한 사전적 관리체계 부족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 국민과 소통하며 과제 발굴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선제적 정부
정책 결정, 조직 운영	▶ 정부 내 조직관리의 경직성, 관행·관습 등으로 빠른 의사 결정과 대처에 한계 존재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	애자일 정부
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	▶ 한 곳으로 통합된 서비스 ▶ 쉽고 빠른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정부

□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문제 대응

-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기업이 협력하여 사회문제를 예견하여 선제적으로 대비

➔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정부**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책 결정

-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정부 구현

➔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애자일 정부**

□ 모든 사회구성원이 편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 구현

- 누구나 간편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리나라 행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혁신

➔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서비스 정부**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방향

가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비전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미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전략과 중점과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주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2.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3. 지역의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지역사회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9. 주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

Ⅲ. 중점과제

※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중점과제의 실행을 위한 과제는 정부혁신과제 번호 병기(예: 1-1-①)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주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누구나 동등하게 / 사회적 약자 보호 / 쉽고 편리하게 / 디지털 전환

□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구현

-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적극 적용 <1-1-①>

* 장애·나이·국적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한 보편적인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관내 공공 시설·웹·앱 및 행정·민원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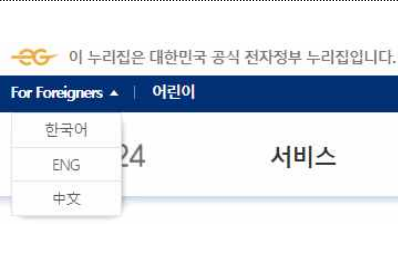
※ 개선 필요사항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 공모전 등으로 주민체감형 과제 발굴 및 지역 내 홍보·확산 병행

- 정부의 제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관련 기본계획·가이드라인 등에 반영

* ('23.3월~) 관계기관·전문가 등과 추진방안 논의 → ('23.4월~) 제도 정비 및 지자체 확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①조례·시행규칙, ②지역 진흥계획(기본계획), ③가이드라인 정비 등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예시 >

		
▶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가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사로를 통해 출입	▶ 고령자와 저시력자가 공공 웹·앱을 큰글씨로 표시 설정하여 이용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이 주요 행정·민원서비스를 다국어로 이용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품 등*의 개방을 확대** 하여 주민 편의 제고

* 시설: 캠핑장, 회의공간,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 물품 등: 생활공구·교육강좌 등

** 개방자원 수: ('20년) 24,428개 → ('21년) 38,437개 → ('22년) 42,970개 → ('23년 목표) 50,000개

□ 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 내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미설치지역*의 센터 확충 및 안정적 운영 지원 <1-1-4>

* 세종('23년 설치 추진), 서울('24년말 개소 예정), 전남, 경북

※ (~'23.상반기) 시도별 1개 이상 권역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구강보건법' 개정 추진

-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1-1-6>

- 정부의 공통표준기능을 활용, 지자체별 실정(급식단가·추진절차·운영 방식 등)에 맞는 플랫폼 구축으로 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 아동급식카드를 배달앱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2년 대구광역시·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 ('23.4월) 사업추진 지자체 선정 → ('23.9월~) 시스템 구축 및 부가서비스 개발

□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국민이 생활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편하도록 국민생활밀접 민원 제도·서비스 개선 추진

- 행안부가 추진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신고 등 이용량이 많은 민원 제도·서비스의 개선 필요사항 발굴 제안에 적극 참여

※ ('23.4월) 대국민 제안 공모 및 행정기관 대상 제안 접수 → (~'23.6월) 제안 검토 → ('23.6월~)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개선 추진 → (~'23.12월)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확산

-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대국민 시스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화면 메뉴 구조, 이용방법, 용어 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그림·사진 등) 제공

□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주민편의 제고

- 디지털정부의 혜택이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지자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타운 조성 등 관련 사업 적극 참여

* (예시) AI민원작성 도우미, 빅데이터기반 미세먼지 대응, AI기반 119신고접수 등

※ ('23.9월) '24년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추진과제 확정 → ('23.12월) 주관기관 확정

('23.4월) 디지털타운(안전·건강·활력마을) 조성 사업 공모 → ('23.5월) 지자체 선정 → (~'24년) 사업추진

◆ 경제활동 지원 / 행정부담 완화 /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지역기업 경제활동 맞춤형 지원 및 신속한 처리로 행정 부담 완화

-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추천·안내하여 기업의 정보 탐색비용 절감
- 각종 서류 심사의 간소화·자동화를 통해 계약 소요기간, 제품 심사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
- 데이터 기반의 상품 대량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지원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데이터 기반 거래·유통 활성화 <1-2-7>

* 농산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각종 유통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여 거래자의 출하·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별·포장·물류 과정을 자동화한 농산물 상품화 시설

※ (~'27년)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100개소 단계적 구축

□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입체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확대, 주소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주소기반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1-2-9>

- 새로 부여되는 입체주소* 등에 대한 주소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클라우드 기반 주소정보 시스템·데이터 통합을 위한 협조 등

* '26년까지 지하·고가·내부도로 64만 개, 사물·공터 1,400만 개 주소 부여 확대 예정

※ ('23.4월~) '디지털 주소정보 통합플랫폼' 구축(1차) 추진 → (~'23.12월) 플랫폼 구축(1차) 완료

- 우수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및 잠재기업 발굴·육성 등 역량강화 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 적극 활용, 지자체별 자체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 안전관리 강화 / 안전 인프라 강화

□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과정 시스템 통합 <1-3-①>

-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준비* 및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 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감염병예방법령 개정사항과 “(가칭) 감염병 통합지침 제정” 내용 숙지,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보건소 등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대상 교육에 적극 참여

** 지자체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검역소(검역단계 수집정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감염병 환자관리 등)와의 연계 대응·업무협의 강화

※ (∼'23.4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3.12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주차장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 인식' 기능 적용*으로 범죄·화재 및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

- 지자체별 관내 적용현황 조사 및 기능 적용 지원, 시설 관리자 및 주민 대상 홍보 등으로 주민 안전 강화

* 긴급자동차(경찰차·소방차·119구급차)에 998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을 발급하는 제도 시행('21.11.~)에 따라, 주차장 무인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 필요

※ (∼'23.12월) 지자체별 현황 조사 및 기능 적용 지원 등 긴급자동차 자동 인식 확산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구축

- 관내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차로 안전시설에 AI와 ICT를 적용한 표준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보행안전 강화 <1-3-⑥>

※ ('23.6월~) 첨단교차로 표준모델 배포 → (∼'23.12월) 지자체 설치 확대 추진

〈 표준모델 예시 〉

- ▶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표지병, 투광기 등 횡단보도 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보조장치를 통합 설치
- ▶ (차량·보행자 위험안내)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호 접근을 감지하여 접근정보를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스피커, LED전광판 등으로 표출
- ▶ (보행신호 자동연장)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감지하여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최대 10초)

-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전국적 확산 추진 <1-3-8>

- 서울·대구·전북·전남 등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 지원

* 지자체별 도로 여건 고려하여 현장제어방식(긴급차량과 교차로의 통신장비를 통해 우선신호 부여) 또는 중앙제어방식(무전 등을 통해 교통정보센터로 위치를 전송받아 우선신호 부여) 적용

< 현장제어방식의 우선신호 예시 >



-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CCTV 연계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1-3-9>

- 방법·주정차 등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CCTV 영상 연계* 등을 통한 재난현장 영상자원 확대,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구축

* '22년 부산광역시(23,180대)·강원도(18,000대) 연계, '23년 대전광역시 연계 추진

※ (~'23.12월) '소방기본법' 개정, 유관기관 CCTV 통합연계, 모바일 기능 개선 등

< 스마트 CCTV 활용 예시 >



- 국가 차원 재난관리자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자원법」 및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 <1-3-10>

* 장비(발전기·양수기 등), 자재(시멘트·철근 등), 물자(방호복·연화칼슘 등) 등 재난관리물품 및 시설

※ (~'23.11월) '재난관리자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23.12월) 표준조례 마련·시행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업무 전반에 활용하여 행정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
 - 행안부가 추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업무 적용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에 적극 참여

※ ('23.5월~8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기관 설명회 → ('23.9월~12월) 평가 → ('24.1월) 결과 공표

- 기관별 보유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주도로 '국가 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공유데이터 구축 및 플랫폼 연계 협조

* 재정금융, 지방행정, 보건복지, 환경·기상, 교통·물류 등 1.5만개 이상 데이터 공유

※ ('23년) 공유DB 구축 및 BPR/ISP → ('24년) 국가공유데이터 구축 → (~'27년) 단계별 연계

□ 과학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범용성 높은 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활용 추진(행안부) <2-4-7>
 - 현장 실정을 고려한 분석모델 선정 참여 및 관련 데이터 제공, 보완의견 제시 등을 통해 활용성 높은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모델 활용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 공공기관에서 개발·시행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발굴, 범용성 있게 표준화·확산함으로써 기관별 유사 분석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최소화 및 분석 소요기간 절감

※ (~'23.5월) 표준분석모델 정립·확산사업 후보 과제 선정 → ('23.7월~) 사업 추진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추진
 - 기관별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역량 개선활동 추진

* 공공기관이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하기 위한 진단(온라인)

※ (~'23.4월) 온라인 진단서비스 오픈 → ('23.5월~)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 공직 내 형식주의 타파 / 긴급현안 신속 대응

□ 지자체 조직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조직관리 부진 지자체 심층진단, 자체 조직진단 강화 등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추진

※ (~'23.3월) 심층진단 계획 수립 및 자체 진단 안내 → (~'23.12월) 개선안 도출 및 반영

-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미개최 위원회 등 지자체 자체 정비 강화 및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대상 소관부처 통보, 근거 법령 정비 추진

※ ('23.4월)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 수립·통보 → (~'23.12월) 지자체 위원회 정비실적 점검

- 구조개혁·재무건전성·관리체계·민간협력 등 지방공공기관 4대 분야 혁신으로 효율성·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2-5-6>

- 구조개혁 관련 반기별 이행실적 점검·평가 대응,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제출 등

※ ('23.7월·12월) 이행실적 점검 및 ('23.12월) 평가, ('23.8월)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제출

< 지방공공기관 혁신 주요 내용 >

- ▶ (구조개혁)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합사업 정비
- ▶ (재무건전성)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관리 강화, 부실사업·비핵심자산 정비 등
- ▶ (관리체계) 관리 사각지대 보완, 재무성과 비중 확대, 직무·성과 중심 관리 전환
- ▶ (민간협력)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시설장비·구매정보 공개, ESG경영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부문 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민첩한 행정 구현

- 내부 행정절차 중 기존의 관행·관습을 답습하고 있는 중복·비효율적인 절차는 과감하게 정비

-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기술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할 행정 절차를 발굴하고, 간소화·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확산

〈 중앙행정기관 정비 분야(예시) 〉

- ▶ **(법제)** 국정과제·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의 법제 소요기간을 약 15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
- ▶ **(결재)** 부서장이 전자문서를 대표로 검토하여 전자문서 기안부터 최종 결재까지의 과정(결재라인)을 최대 3단계*로 간소화**
 - * 예) 기존(7단계): 사무관 기안 → 팀장·과장·국장·실장·차관 검토 → 장관 결재
 개선(3단계): 사무관 기안 → 과장 대표검토(팀장~차관 병렬공람) → 장관 결재
 - ** 최종 결재권자까지 보고 완료한 경우, 전자문서 결재는 간소화하여 처리

-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내부행정상 공통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전반 혁신
 - 행정업무 자동화 커뮤니티*(온나라 지식)·기관별 연구모임 등 활용, 범정부 우수사례·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하고 업무에 직접 적용
 - * 범정부 행정업무 자동화 담당자 소통채널로, 자동화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오픈 소스 공유, 아이디어 제안 및 Q&A를 통한 질의·응답 코너 등으로 구성
- 개인의 자율과 책임 하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 <2-5-Ⅲ>
 -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문서결재, 자료확인 등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현
 - * 온북(2PC→1노트북) 도입 및 현장공무원 태블릿 PC 지급, 재택근무시스템으로 업무포털에 접속하여 업무처리, 모바일 전자결재 등

□ 원팀으로 긴급현안에 신속히 대응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회(원하청-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확산에 지자체 적극 참여 <2-5-Ⅳ>
 - 상생협의회 운영 전 과정에 소통·협력 강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원
 - * 원하청 주도로 해법을 마련·이행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발굴·지원, 고용부산업부기재부공정위울산경남전남 등이 협력하여 조선업 이중구조 우선 해소 추진
- ※ (~'23.6월)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 구축 → ('23.7월~) 타 업종 확산으로 노동시장 전반 개선
- 전세사기, 마약차단, 탄소중립 등 국가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강화

◆ 성과 보상체계 확대 /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 적극행정 활성화

□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대

-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대상* 단계적 확대

* 정원의 18% → 20% 수준

※ ('23.3월~) 세부 방안 검토 → (~'24.1월) 규정·지침 개정

-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성과 우수 공무원에게 과감히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가산금*·장기성과급** 도입, 특별승급 요건 완화*** 근거 마련

* 업무실적 상위 2%이내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 등급 지급액의 50% 추가 지급(단년도)

** 3년 이상 최상위등급(S등급) 성과평가받는 공무원에 대한 추가 성과급 지급 *** 3년→1년

※ ('23.4월~) 운영 현황 조사 → ('23.9월~) 운영방안 수립 → (~'24.1월) 규정·지침 개정

□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인사제도 운영

-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하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 (현행) 출산휴가(90일)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개선) 병가(60일)와 연계한 질병휴직(합산 6개월 이상)도 결원보충 인정

※ (~'23.7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 외에 연가 전환도 가능하도록 근무환경 조성

※ ('23.3월~) 개정안 입법예고 → (~'23.상반기) 복무규정 개정 → ('23.하반기~) 지자체별 조례 개정

-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 별도 협의 없이도 경채시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 ('23.3월~) 개정안 입법예고 → (~'23.상반기) 임용령 개정

□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지자체별 편차가 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공무원 신뢰도 제고

-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법무·적극행정 담당 부서장 중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권리보호 강화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23.5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계획 수립·통보 → ('23.8월) 지자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실시 → ('23.11월) 지자체 운영현황 점검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배경 〉

- ▶ 기초지자체의 면책제도 운영 미흡(감사연구원, 적극행정면책 운영실태 분석, '21.12)
- ▶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총 4,679명)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조사 결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27%(1,2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감사연구원,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19.10)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시범운영

- 시범운영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참여 및 내실있는 운영 지원

*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 부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2~4개 기관 선정 예정

※ ('23.4월) 계획 수립 → ('23.5월~6월) 지자체 공모 및 선정 → ('23.8월) 시범운영 실시 → ('24.1월) 성과 분석 및 전면시행 여부 검토

7 지역사회 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 주민 생명·안전 위협요인 예측·대응 / 위기상황 조기 발견 및 신속 전파

□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요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업무 전반에 공공·민간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정부의 예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
 - 민원데이터·실시간 뉴스 등을 수집·분석한 재난안전 민원예보*에 따라 주민 안전 위협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 <3-7-3>
 - * 국민권익위 민원빅데이터와 언론정보를 융·복합 분석, 국민 안전 이슈를 조기 탐지하여 관계기관에 예보(민원정보 시스템 활용)
 - ※ ('23.2월~)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예보 실시
 - 제작 완료된 '도시침수지도*'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내수침수에 의한 홍수대책 수립 등 폭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비 <3-7-4>
 - *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극한강우조건에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우수배제시설의 용량초과 및 고장 시 발생 가능한 가상의 침수범위 및 침수심을 나타낸 지도
 - ※ ('23.6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제작 착수 → (~'23.12월) 한강 권역 제작 완료
 - 고도화된 산사태 위험알림 정보*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한 주민대피 등 선제적 재난 대응 <3-7-5>
 - * 산사태 위험도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구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23.6월~)

□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 조기 발견 및 신속 전파

- 요소수 부족 등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위기상황에 대한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체계 강화
 - *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추진('24년~), 분야별 조기경보시스템 통합·연계('22.6월~, 위기징후 범정부 공유) 등
- 재난·사고 등 위험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실시간 전파

◆ 민관협업으로 문제 해결 / 지역현장 중심 현안 해결 / 공공데이터 개방

□ 민·관이 협업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추진
 - 지자체·지역 주민 소통체계(행안부)와 과학기술 전문성(과기부)을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추진
 - ※ ('23.8월) 지역현안 수요조사 → ('23.9월) 연구기관 기술제안 → ('23.10월~'24.3월) 문제기획리빙랩* 선정·진행 → ('24.4월~) 본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실증 진행
 - * 연구자·지역주민이 함께 참여·소통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공감e가득) 참여로, 주민안전 증진 및 격차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 <3-8-③>
 - * 안전(교통·보행·화재·먹거리·범죄 등), 돌봄, 격차해소, 건강, 환경, 에너지, 지역활성화 등
 - ※ (~'23.4월) 과제 선정 → (~'23.12월) 민간기업·지자체·지역주민 공동으로 과제 수행
- 축산악취 등 환경문제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중심으로 해결
 -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고,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3-8-⑤>
 - * 지자체 공무원, 축산농가, 경종농가, 지역주민(민원인), 축산환경 전문가 등 참여
 - ※ ('23.4월) 악취개선 시급지역 30개 시·군 악취개선계획 수립 및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분기별) 지역협의체 운영 실적 보고, (연중) 지역주민 대상 지역협의체 정책 홍보

□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현안 해결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시도별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3-8-⑧>
 - * 클러스터 내 기업·인재 축적을 위해 지역대학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 현안 반영
 - ※ (~'23.3월) 시·도별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 ('23.4월~) 사업 추진

- 대학을 창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지역 우수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3-8-9>

*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강화 및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

** 조성 시 지방비 확보, 조성 후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펀드 조성 등

※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신규 선정, (~'23.4월) 혁신파크 추가 선정(2개 대학)

-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지역 활성화 추진

* 지역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 (예: 임실 치즈마을, 강릉 커피거리 등)

※ (~'23.5월) 로컬브랜딩 사업대상 선정 → (~'23.12월)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및 사업 성과분석

< 로컬브랜딩 대표사례: 임실 치즈마을 >



- ▶ (지역특색) 산지와 풀밭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산양을 키우는 목축업에 적합
- ▶ (주민참여) 마을 총회를 통해 마을 이름을 '느티마을'에서 '치즈마을'로 설정하고, 마을 주민을 스위스 산업 연수에 파견하여 치즈 공장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확장
- ▶ (가치창출) 치즈밸리 육성사업, 테마파크, 임실N치즈축제 등 치즈 관련 산업 발달

- 디지털 확산, 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반 마련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활력 제고 <3-8-10>

* (파주시) 시 기반 수요응답버스 (부산시)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인천시) 스마트 주차플랫폼 등 58개 사업

※ ('23.4월~) 지자체별 예산 배정 및 사업 추진 → ('23.10월~)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시설 및 관광단지 구축, 신규 소득원 창출,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참여 <3-8-11>

* 어촌 경제·생활플랫폼 조성, 안전인프라 개선 등 5년간('23~'27) 총 300개소 사업 추진

※ ('23.하반기) '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설명회·공모 → ('23.12월) '24년도 사업 대상지 60개소 선정

○ 지역우수인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정주인구 증대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시범운영)*의 제도적 안착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방안 마련 <3-8-12>

*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창업 등의 조건으로 거주(F-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 우선 발급, 28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운영 중

※ (~'23.6월)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 → (~'23.12월) 확대 시행

- 청년 귀어귀촌인의 성공적 어촌 정착과 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귀어학교)·정착(청년어촌정착금·임시거주시설) 지원 사업 내실화 <3-8-13>

※ ('23.2월~)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추진 → (~'23.12월) 교육·주거 등 지원

□ 수요 맞춤형 데이터 개방으로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국성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표준화하고,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여 전국단위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행안부가 추진하는 전국성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광역자치단체 적극 참여

※ ('23년) 공영자전거 실시간 이용현황(서울, 대전, 세종 등 시범개방) → ('24년) 단계적 확대

○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품질관리 및 제공 기반 확보

-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제 본격 도입*에 따라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획득을 위한 심사 대응 및 데이터 품질 수준 제고 노력

* 품질 인증 제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23.12월 예정)

※ (~'23.6월)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추진계획 마련, 인증모델 개선 → ('23.6월~) 인증심사

◆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 주민의견을 정책·사업에 반영

□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사업에 반영

-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이 쉽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행안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의 안정적 정착과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담당자 교육·홍보 <3-9-②>
 - * 청원사항: 국민의 피해 구제, 위법·부당 행위 시정,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
 -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공모전이 보다 투명·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자체 주관 공모전에 대한 운영 규정 마련* <3-9-③>
 -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2.8.10.)에 따라 지자체 주관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협조 요청 및 참고자치법규안 배포('22.11.)
 -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 추진 예정(∼'23.12월) '행정절차법' 개정안 마련 → ('24년~) 개정 추진
- 제안의 신속한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국민제안규정' 개정 추진 <3-9-④>
 - 규정 개정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불채택된 국민제안을 채택하려는 경우,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제안을 채택·실시
 - * 조례·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자치법규 정비도 병행
 - ※ ('23.4월) 개정계획 수립 → (∼'23.7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23.8월) 규정 개정

IV.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 범정부 혁신 추진체계 운영

- (정부혁신위원회)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 설정,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주요과제 자문 대응 등 수행

-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과제별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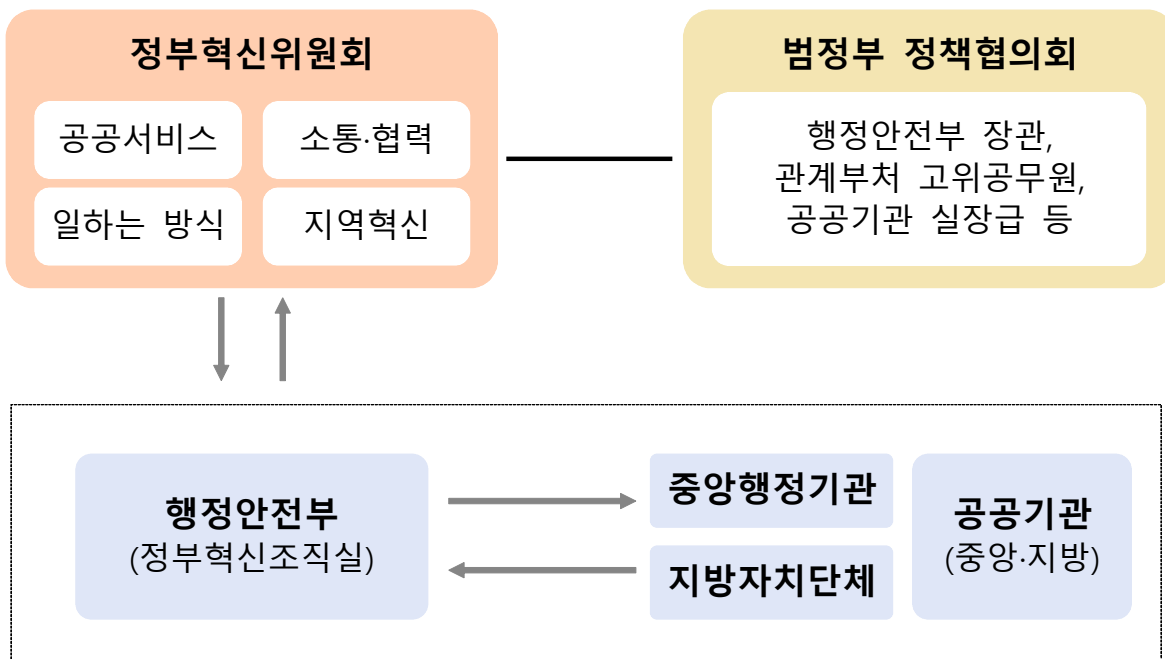
* 공공서비스, 소통·협력,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 등 4개 소위원회

** SNS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이 주요 과제와 관련된 쟁점·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면, 관련 소위원회가 논의하여 개선방안 등 의견 제시

- (정책협의회) '원팀'으로 빠르게 현안을 해결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논의하며, 혁신위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실장급 참석

< 정부혁신 추진체계 >



□ 지속적인 성과관리 추진

- (컨설팅)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평가) 혁신평가로 범정부적 혁신성과 제고

□ 우수한 혁신성과를 국내·외로 확산

- (범정부 확산) 정부혁신 전략회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혁신 박람회 등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에 혁신성과 공유
 - *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혁신 공감대 확산
 -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 등으로 정부혁신 성과의 주민체감도 제고
 - *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우수 혁신사례 사례의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 사업비(특교세) 지원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 제공
- ※ (~'23.4월) 확산대상사례 선정, 지자체 공모 → (~'23.12월) 공모 선정, 사업 추진 및 성과 공유

- (국제적 확산) 우리나라 주요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
 - 우리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혁신하고,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확산**
 - *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개발은행(IDB) 등
 - ** 외국 정부가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쉽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소개

〈 우리 정부혁신 성과의 국제적 확산 예시〉

- (주소체계) 국제표준(ISO 등)에 '한국형 주소체계'를 반영하고, 주소정보산업 모델 발굴 및 지원으로 우리나라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자세정) 홈택스, 빅데이터시스템 등 전자세정 수출을 확대하고, 개도국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홍보 등을 강화하여 수출발판 마련
- (법제정보) 개도국 정부 실정에 맞게 법령정보·입법지원 등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법제 우수사례·경험·정보 등을 공유

-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외국 정부의 행정제도, 관련기관, 관심분야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

V. 추진일정

1단계: 기반 마련

- 범정부 혁신 추진체계 운영 : 1월~
※ 정부혁신위원회 전체회의(1.13.) 및 토론회(2.16., 3.16.) 개최
- 정부혁신 대국민 인식조사* : 1월
* 정부혁신이 시급한 분야, 정부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등
-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마련 : 3월 중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종합계획 마련 : 3월 중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실행계획 마련·제출 : ~4월 중

2단계: 성과 창출

-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 강화 컨설팅 : 4월~
- 정부혁신 전략회의* 개최 : 5월 중
* 내용: 정부혁신 추진방향 보고, 애자일 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 토론 등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 12월~

3단계: 확산·내재화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 : 4월~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지자체 참여) : 11월~
- 정부혁신 박람회(지자체 참여) : 11월~
- 정부혁신 우수사례 해외 수출 : 계속
-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축적·홍보 : 계속